

지역특구제도의 선별적 규제완화 효과 분석

여 차 민 · 이 석 환 · 하 현 상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or not local special district institution which reflects local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local economic growth. We build a model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local economic growth. For more systematic analysis, the model not only considers local special district institution defined as policy/institutional condition, but also includes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as critical factors influencing local economic growth.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s, while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financial conditions usually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businesses inducement, employee increase, and local revenue raising, policy/institutional conditions do not have statistically positive influence on the almost all variables of local economic growth, except for the influence of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special district. These findings imply that substantial local economic growth would be achieved by a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considering economic and financial conditions together, rather than partial policy alternatives such as local special districts, which are focused on policy/institution. This study carefully suggests that decision makers of local governments need to consider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es.

제1저자 : 여차민, 제2저자 : 이석환, 교신저자 : 하현상

주 제 어 : 지역특구제도, 지역경제성장, 규제완화, 지방재정

Key words : Local Special District, Local Economic Growth, Deregulation, Local Finance.

1. 서론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지역성장을 위한 주요 정치·행정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노력은 더욱 다각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대표적인 방법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였으며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완화가 두드러진 정책수단들이었다(Koven & Lyons, 2003; Rubin & Rubin, 19872; Feiock & Jeong, 2002). 특히 규제완화는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내세운 단골공약이었으나(최병선, 2012) 다수의 기존연구들은 규제완화의 효과보다는 개발인센티브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Feiock & Jeong, 2002).

규제완화는 인센티브 제공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많은 연구가 규제가 생산성을 저하시키거나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Bassanini & Ernst, 2002; Bayoumi et al, 2004). 특히 환경규제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주장을 해왔다(Jaffe et al., 1995; Palmer et al., 1995; 이미홍, 2003; 조주현, 2003; 강만옥, 2006). 실제 일부 연구는 구체적 주장은 다르지만 포괄적으로는 규제완화가 직접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CEPR-IFS, 2003; Alesina et al, 2003; 김상헌, 2010). 그러나 규제완화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며 실질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증적 분석이 미비하며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적 규제와 실질적 국가성장 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Nicoletti & Scarpetta, 2003) 오히려 환경규제의 경우, 경제성장 및 생산성, 기업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이영범·지현정, 2011; Lanoie et al., 2008; Palmer et al., 1995; Porter and Linde, 1995a; 1995b; Vries & Withagen, 2005).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의 규제완화 노력은 양적인 규제개혁 또는 완화에 초점을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관련 연구 역시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규제개혁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한정되어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차원의 규제개혁이나 완화에는 관심과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적 인식의 결과로 지역별로 규제완화를 다각화시켜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2003년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의 지역개발 제도가 국가경제활성화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지역특구제도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찾을 수 있다(지식경제부, 2011a: 17).

그러나 지역특구제도 실시 이후 학술적 차원에서 지역특구가 당초 의도했던 목적 즉, 지역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실시된 규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

는 미시적으로는 지역특구의 효과를 분석하고 거시적으로는 지역에서의 선별적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괄적 규제완화나 개혁이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실시된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지역특구제도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들을 분석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다양한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관련 정책과 제도,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김진덕·조택희, 2012; 강운호, 2008; 김태은·구교준, 2007; Wolman & Spitzley, 1996; Peterson, 1981).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요인들의 대표적 변수를 체계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들 변수들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역경제성장이 정책·제도적 요인인 지역특구제도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¹⁾

이 연구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먼저 기존문헌 검토를 통해 지역경제성장의 측면에서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지역특구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 변수들을 확인한다. 그런 후 지역특구제도를 정책·제도적 요인으로서 설명하고 여타의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포괄하여 지역특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모델과 가설을 구축한다. 그리고 지역특구를 통한 선별적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다른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검증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역차원의 규제완화 및 여타요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II. 연구모델

1. 지역특구제도의 효과

지역특구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특구제도의 목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도도입 시 당초 의도했던 목적 달성여부를 통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특구제도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특성화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

1)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제도는 다양하고 각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지역특구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특구제도가 지역경제성장의 주요한 제도적 수단으로 실효성을 갖는지 보고자 한다.

으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자립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11b; 이희연, 2009: 8).

그러므로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는 지역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 즉 지역경제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우선 검토함으로써 지역특구제도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도록 한다.

지역경제성장(Local Economic Growth)은 결과와 산출에 많은 관심을 둬으로써 변화나 개선에 초점을 두는 지역발전(Local Economic Development)과는 일정부분 구별되어 사용되고 있다(Wolman & Spitzley, 1996; Kindleberger & Herrick, 1977; Beauregard, 1993).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경제발전은 다양한 유사변수들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과 발전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기존의 이들 연구들에서 지역경제성장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지역경제성장의 효과는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측정되고 있다. 경제성장의 결과가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명확히 일치된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은 고용창출에 관심을 갖는다. 고용창출은 기업유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은 인구유입을 유발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외연적으로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게 된다(Wolman & Spitzley, 1996; Blair, Fichtenbaum, & Swaney, 1984; Riposa & Andranovich, 1988). 한편, 다른 연구는 지역경제성장을 통해 지방재정 역시 강화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고용창출과 함께 재정확충의 정도 역시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chneider, 1989; Jones & Bachelor, 1993). Furdell(1994)과 Bowman(1987)이 선출직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경제성장의 목표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고용창출과 재정확충을 지역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언급한 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용창출과 기업유치는 현재 정부가 매년 지역특구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대리하는 변수로 더 의미가 있다. 또한 재정확충 역시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방재정의 자립화 도모라는 지역특구제도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는 변수로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용창출, 기업유치, 재정확충 정도를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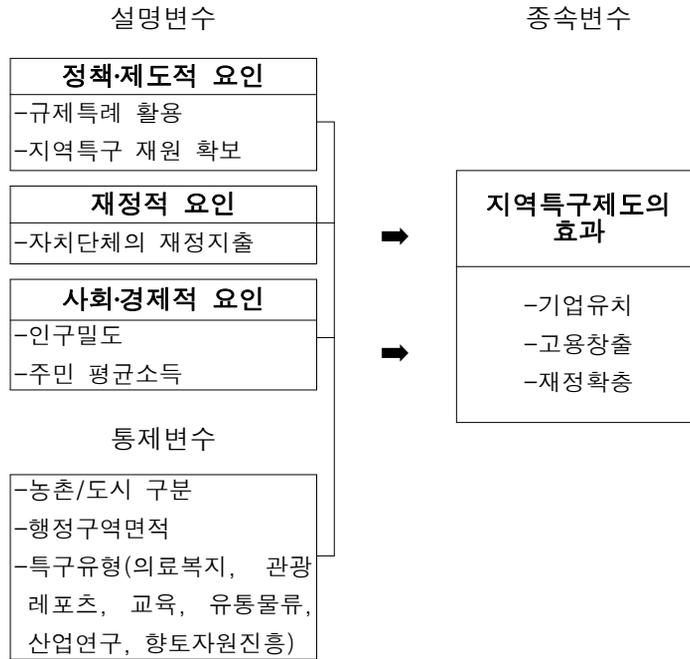
2. 지역특구효과의 영향요인

지역특구의 효과 즉,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는 대부분 재정적 요인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진행되어 왔다. Peterson(1981)의 주장처럼 재정여건을 관리·확충하기 위한 지역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재정적 요인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Bowman, 1988; Swanstrom, 1985; Arrow & Kurz, 1970; Barro, 1990; Grier & Tullock, 1989). 재정과 경제성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재교육, 공공인프라, R&D, 건강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Lucas, 1988; Barro, 1990; Romer, 1990; Bloom et al, 2001; Zagler & Drunecker, 2003).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들은 재정책확대와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주목하여 왔다(김진덕·조택희, 2012; 윤지웅 외, 2009; 문병근·성상기, 2011; 강운호, 2008; 김종순, 1992).²⁾ 또한, 경기회복, GDP 증가, 총자본 증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재정책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박종규, 1998; 백응기·박승준, 2007).

이상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재정적 여건이 지역경제성장의 논의에서 주요한 변수이지만, 일부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 정치·제도적 여건 등을 중요한 변수로 포함시킨다(Wolman & Spitzley, 1996; Feiock, 1987; Matulef, 1987; Ram, 1986; 강운호, 2008; 박지형·홍준현, 2007; 백운현, 2004; 김상현, 2010). 그러나 이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제도적 요인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김상현(2010)이 유일하다. 김상현(2010)은 이익집단의 압력 정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일부 연구가 시군통합, 공무원 규모, 선거, 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지역경제성장 효과와 연계시켜서 분석하기는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처럼 지역특구제도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 또는 제도도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박지형·홍준현, 2007; 백운현, 2004; 강운호, 2008).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요인의 범주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구를 종합해보면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제도적 요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가설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특구제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장을 위해서 각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경제적 산물이기 때문에 유형별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역특구유형을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 유통물류, 산업연구, 향토자원진흥의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더불어 도·농 간의 특성, 지리적 규모 등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구분한 세 가지 차원의 영향요인과 함께 고려할 통제변수를 포괄하여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2) 거시경제적 시각에서 소득과 소비, 통화량, 지역내 총생산 등의 효과를 연구함으로써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김종순, 1992; 김성태, 2000; 오병기, 2002; 2006; 조동근·김종백, 2005; 김종규, 2007; 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미시경제적 시각에서 주택건설, 사업체 종사자수,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등과 같은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연구도 이루어졌다 (김태영, 2001).



(그림 1) 지역특구효과에의 영향요인 모델

1) 정책·제도(지역특구제도)적 요인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효율적으로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면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거에 기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지역별 특성과 여건이 반영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정책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창의와 자율을 바탕으로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지역특구제도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왔던 지역개발정책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특화사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정책과 차별적이다. 또한 지역특구제도는 기존의 지역개발제도와 달리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 규제완화라는 방법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을 갖는다(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11a; 최재현, 2009).

지역특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 세부내용 및 특화사업자, 대상지역, 규제특례 내용과 적용범위, 자원조달방안,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및 사전 환경성검토 협

의내용 등이 포함된 특구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지역특구위원회 실무위원회 검토,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특구로 지정·고시한다. 2004년 12월에 6개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현재 11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150개의 지역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한편, 지역특구는 향토자원진흥 특구, 유통·물류 특구, 관광·레포츠 특구, 산업·연구 특구, 의료·복지 특구, 교육 특구 등 6개 특구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 중 향토자원진흥 특구가 63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관광·레포츠 특구가 36개, 교육 특구가 22개, 기타 나머지 영역이 29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당시에 전남(28개), 경북(24개), 충남(16개), 충북(15개), 전북(14개), 경남(12개) 등 비수도권에서 지역특구제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도 관광레포츠, 교육, 향토자원 등의 특구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특구제도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구사업은 자체적으로 재원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재원은 국비, 지방비(시·도비와 시·군·구비), 민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된다. 2011년 12월 현재 119개 지방자치단체의 150개 특구의 재원투입 계획규모는 9조 7,778억 원이다. 이 중 국비는 총 1조 9,145억 원으로 전체의 19.6%, 지방비는 3조 1,507억 원으로 32.2%, 민자는 4조 7,126억 원으로 48.2%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11a). 지역특구제도는 규제특례의 적용과 재정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운영된다. 따라서 지역특구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즉, 지역특구제도의 정책·제도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규제특례 활용과 재정지원 변수를 정책·제도변수로 사용한다.

(1) 규제특례 활용

규제의 공익적 편익과 사익적 비용 논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김상헌, 2010; 최병선,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는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는 규제가 유발하는 비용과 규제완화의 효과에 집중되어 왔다. 규제를 완화하면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증폭된다는 것이다(Bailey, 1986; 최병선, 2012; Feiock & Jeong, 2002). 우리나라에서 지역경제성장과 규제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많게는 20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생산성 향상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김군수, 2008; 경기개발연구원, 2004; 김은경·김정태, 2007).³⁾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구제도에서의 규제특례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유인함으로써 지역주민들

3)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규제완화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몇몇 실증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차원에서 비용이나 효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임동순·조창현·김대욱, 2008; 김종호·김원규·조창현, 2007; 김상헌, 2010).

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상당수의 직원과 노동자들이 기업 이동 시에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는 생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유치는 인구유입을 유발시킬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특구에서 특례활용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H1: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구 규제특례 활용이 많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역특구 재원확보

지역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뿐만 아니라 재원확보 역시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지역특구 신청 시에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치단체들은 공공재원(국비, 지방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지역특구에서 성공적으로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재원이 풍부할수록 자치단체들은 더욱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정책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Schwartz, et al., 2008). 예컨대 도로나 항만 같은 기초인프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같은 기술집약적 인프라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Sethi et al, 2002; 김태은·구교준, 2007; 황의진, 2002). 지역특구를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야하기 때문에 지역특구에 필요한 재원확보규모가 클수록 자치단체들은 성공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기업들이 비슷한 잠재적 투자지역이 서로 경쟁적일 때만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일반적으로는 잠재적 투자지역의 경제적 여건을 더 중시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Oman, 2000).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한정된 연구이기는 하나 시장규모나 소득수준 같은 경제적 요인이 외국인 투자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김태은·구교준,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지역특구제도의 속성장 인프라가 빈약한 자치단체에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관점에서 재원확보가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한다.

H2: 지역특구제도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재정적 요인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투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1960년대 이후 재정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가장 독보적 연구는 Arrow and Kurz(1970)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기회복, GDP 증가, 총자본 증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해서 자본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박종규, 1998; 백웅기·박승준, 2007). 그리고 교육분야, 공공인프라, R&D, 건강분야에 대한 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같이 보다 미시적 수준에서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또한 진행되었다(Lucas, 1988; Barro, 1990; Romer, 1990; Bloom et al, 2001).⁴⁾

이러한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연장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정지출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재정투자확대가 지역경제 투자를 확대시켜 지역경제 유인력을 제고하여 지역생산활동을 증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가 신장된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⁵⁾ 우리나라에서도 재정지출과 지역경제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는데 재정지출은 총지출, 경제개발비, 사회개발비, 1인당 세출액 등으로 다양하게 측정되었다(김진덕·조택희, 2012; 윤지웅 외, 2009; 문병근·성상기, 2011; 강윤희, 2008; 김성순, 1998, 1991; 노근호, 1994).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의 성장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지방재정의 지출이 확대되면 지역적 차이를 무시하는 중앙중심의 재정정책보다 지역의 상황에 더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Oates, 1993을 Davoodi&Zou, 1998: 245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H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규모가 클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그간의 많은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지역주민의 소득, 인구, 산업입지, 경제참여 비율 등의 변수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구규모가 크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제활동참여비율이 높고 입지조건이 개선되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의

4) Zagler&Drunecker(2003: 397-398)에서 인용.

5) 특기할만한 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과 성장 간의 관계가 쌍방향 인과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이다 (노근호, 1994를 강윤희, 2008에서 재인용). 즉, 지역경제의 성장이 재정수입의 확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재정지출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오병기, 2001; 채중훈, 2001을 강윤희, 2008: 369에서 재인용).

성장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강윤희, 2008: 368).

(1) 인구밀도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관련 변수들을 포함시키고 있다(모성은, 1999; 강윤희, 2008; 김광춘, 2011; 김종섭, 2000). 인구의 유입이 인구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게 되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Wolman & Spitzley, 1996; 강윤희, 2008: 376; 김광춘, 2011). 그런데 지역경제성장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인구유입이나 인구규모에는 공간개념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김광춘, 2011: 5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간개념이 포함된 인구밀도를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토지가 지역마다 고정적·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구밀도의 지역 간 차이는 경제활동의 밀도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밀도가 큰 반면,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경제활동 밀도가 작아 결과적으로 인구밀도의 차이가 지역경제성장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김광춘, 2011: 5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한다.

H4: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주민 평균소득

주민생활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교육여건, 환경, 생활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소득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Kahn, 2006).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은 평균적으로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생활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지역이슈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Becker & Mulligan, 1997). 이들은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 그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역할을 하거나 적어도 지역 언론이나 오피니언 리더들과 더 나은 접근성을 갖는 경향이 있다(Kahn, 2006). 그래서 이들은 더 쉽게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에게 그들의 의견이나 당면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균 소득이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정책결정자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압박을 더 많이 받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6). 뿐만 아니라 평균소득이 증가할수록 그 지역의 재정수입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더 많은 예산을 지역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도시경제의 성장은 소득이나 재정과 같은 요인들이 동시에 건전하게 성장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다(박지형·홍준현, 2007). 이러한 시각에서 평균소득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 더 많은 정책수단을 고안하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높은 평균소득을 가진 자치단체가 더 좋은 경제적 여건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예측한다.

H5: 주민의 평균소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방법론

1.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1) 데이터 수집

이 연구는 통합 창원시가 탄생하기 이전의 230개 자치단체 중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2007년 자료를 활용한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는 200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의 측정과 관련하여 정책·제도적 여건의 규제특례 활용수와 지역특구제원확보는 지식경제부가 발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재정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1인당 총지출은 지방재정연감에서 수집하였다. 사회·경제적 요인의 인구밀도는 각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에서 수집하였으며, 주민 평균소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자료에서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통제변수로서 행정구역구분에 대한 데이터는 국토해양통계연보에서 확보하였고 인구는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에서 확보하였다. 그리고 특구유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수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체수, 사업체 종사자수와 지방재정연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약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특구제도의 지역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1년의 시차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2008년과 2009년의 사이의 증감과 2008년도에서 1년이 경과한 2009년의 자료를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역특구제도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성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변수 3개를 선정하였다. 먼저, 기업유치를 대변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 사업체수 증감 ($\Delta NCOM$)과 2009 사업체수 ($NCOM$)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기업유치와 고용창출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는 고용창출을 대변하기 위해서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Delta NEMP$)과 2009년 사업체 종사자수 ($NEMP$)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서 지역경제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권에서 발생하는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이 변수는 1인당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의 증감 ($\Delta LREV$)과 2009년의 1인당 자체수입 ($LREV$)을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각 종속변수의 1년간 (2008 - 2009년)의 증감과 2009년의 지표값을 각각 사용하여 6개의 모델을 가지고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2) 설명변수

본 연구는 기존문헌들을 토대로 지역경제성장을 설명하는 요인을 크게 정책·제도, 재정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 3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정책 및 제도적 요인은 지역특구에서 자치단체가 활용한 규제특례 건수 ($NREG$)와 지역특구재원확보금액 (FIN)을 사용하였다. 이들 두 변수는 지역특구제도 운영의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정책·제도적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재정적 요인 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LOCEXP$)을 사용하였다. 지역특구제도에 투입된 재원은 지역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유치한 자금으로 자치단체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투입한 재정지출액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구밀도 ($POPDEN$)와 주민 평균소득 ($AINC$)을 사용하였다. 이들 변수들은 모두 2008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인구, 농촌과 도시의 구분, 지역특구 유형을 통제하였다. 농촌과 도시의 구분 ($AGUR$)은 행정구역 상 군이면 "1", 시나 구이면 "0"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그리고 인구 (POP)는 자치단체 간의 분산을 고려하여 자연대수변환(\log)을 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특구유형은 의료복지 (MED), 관광레포츠 (TOU), 교육 (EDU), 유통물류 (TRA), 산업연구 (IDR), 향토자원진흥 (LOC)의 6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더미변수를 사용해 유형에 해당되면 "1"을 입력하고 아니면 "0"으로 구분하여 입력하였다. 특구유형의 경우, 지역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특구유형별 사업목적과 그에 따른 성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서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변수와 척도는 부록 1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3) 분석방법

지역특구제와 같은 정책·제도가 지역경제성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그 외의 재정적, 사회·경제적 여건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지역경제성장을 대변하는 종속변수들은 모두 비울척도로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회귀방정식은 아래와 같다.

$$Y_{it} = \alpha_0 + \beta_1 NREG_{it-1} + \beta_2 FIN_{it-1} + \beta_3 LOCEXP_{it-1} + \beta_4 POPDEN_{it-1} + \beta_5 AINC_{it-1} + \beta_6 POP_{it-1} + \beta_7 AGUR_{it-1} + \beta_8 MED_{it-1} + \beta_9 TOU_{it-1} + \beta_{10} EDU_{it-1} + \beta_{11} TRA_{it-1} + \beta_{12} IDR_{it-1} + \beta_{13} LOC_{it-1} + e_{it} \text{-----(1)}$$

여기서 i 는 228개의 기초자치단체를, t 는 2009년의 시점을, e_{i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종속변수인 지역특구의 효과 (Y_{it})는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Delta NEMP_{it}$), 사업체 종사자수 ($NEMP_{it}$), 자체수입 증감 ($\Delta LREV_{it}$), 자체수입 ($LREV_{it}$), 사업체수 증감 ($\Delta NCOM_{it}$), 사업체수 ($NCOM_{it}$)의 여섯 가지 변수로 측정되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데이터 검증을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와 중구가 이상치 (outlier)로 나타났는데 영향력 있는 사례 (influential case)로 판단되어 제거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특례활용수, 지역특구 재원확보, 1인당 총지출, 월평균소득과 통제변수인 인구의 높은 편차를 고려하여 자연대수변환을 하였다. 잔차의 정규성 (normality)을 산포도 그래프로 분석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을 확인하기 위해서 Breusch-Pagan검증을 실시하였고, 검증결과 등분산성 가정이 기각된 경우에는 추정의 표준오차를 교정하였다. 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을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 간의 평균 분산팽창지수 (Mean VIF)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모델에서 비교적 양호한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분석결과표에서 같이 제시하였다.

V. 분석결과 및 논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역특구제도 및 여타요인들의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각 변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사업체수, 사업체 종사자수, 자체수입 모두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사업체수는 약 6,198개이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53,3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당 자체수입의 평균은 약 1.70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1인당 자체수입 증가량은 약 0.23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6가지 규제특례 중에서 2008년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약 1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원확보의 평균금액은 약 117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총지출은 약 287백만 원 정도이며, 1인당 평균소득의 평균은 약 22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과 도시의 구분을 보면 약 39퍼센트가 농촌이고 나머지 61퍼센트는 도시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인구는 평균적으로 약 211,8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규제특례 유형을 보면, 향토자원진흥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의료복지, 관광레포츠, 교육과 산업연구, 유통물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기술적 분석

변수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사업체수 증감		102.60	276.64	-841	1375
2009 사업체 수		6198.66	5952.11	377	26762
종사자수 증감		1869.75	3038.81	-3529	17219
2009 종사자 수		53321.72	56614.76	1816	315130
1인당 자체수입 증감(백만원)		0.236	0.454	-2.887	2.205
2009 1인당 자체수입(백만원)		1.70	1.34	0.17	8.58
설명변수					
특례활용수		1.08	2.09	0.00	10.00
지역특구재원확보(억원)		116.60	391.00	0.00	3284.90
1인당 총지출(백만원)		287.48	228.84	44.25	1057.08
인구밀도		3923.10	6374.70	19.51	28853.71
월평균소득(만원)		229.16	41.05	139.80	398.26
농촌지역		0.39	0.49	0	1
인구		211805.10	198345.10	1016.00	1067425.00
유형1(의료복지)		0.01	0.11	0	1
유형2(관광레포츠)		0.09	0.28	0	1
유형3(교육)		0.06	0.24	0	1
유형4(유통물류)		0.04	0.20	0	1
유형5(산업연구)		0.06	0.24	0	1
유형6(향토자원진흥)		0.15	0.36	0	1

먼저 정책·제도적 요인, 재정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의 설명변수가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각 자치단체의 사업체수 증감,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증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사업체수 증감 모델은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의 유의확률이 0.000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Adj. R^2$ 는 0.2170로서 약 22퍼센트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저자들이 기대했던 특례 활용수나 지역특구 재원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통제변수로 고려했던 인구와 도·농구분이 사업체수 증감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구규모가 클수록, 도시보다 농촌에서 사업체수 증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특구의 유형인 의료복지 특구와 교육 특구가 자치단체의 사업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의 경우,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의 유의확률이 0.000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Adj. R^2$ 는 0.2588로서 약 26퍼센트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요인에 해당되는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정책·제도적 변수인 특례활용수와 재원확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통제변수로 고려한 인구변수는 인구규모가 클수록 사업체 종사자수 증가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자체수입 증감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델은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의 유의확률이 0.000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Adj. R^2$ 는 0.2669로 약 27 퍼센트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모델의 경우 사업체수 증감이나 종사자수 증감 모델과 다르게 정책·제도적 변수인 지역특구 재원확보 규모가 클수록 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 증가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1인당 총지출은 자체수입 증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의 예측과 상반되는 결과로서,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 당시 자치단체들은 경기침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고, 중부세 과세 대상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난관에 처해있는 자치단체일수록 실제 재정지출을 증대하였지만, 자체수입은 비례해서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기인하여 재정지출이 자체수입 증가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자체수입을 감소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분석결과(1년간의 지역경제성장 변화지수)

변수	모형	사업체 증감 (2009-2008)	종사자 증감 (2009-2008)	자체수입 증감 (2009-2008)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설명변수				
정책·제도(특구제도)				
	특례활용수(log)	12.1112 (39.4697)	-2.6862 (384.7577)	0.0824 (0.0868)
	지역특구재원확보(log)	1.6937 (10.5294)	61.8621 (129.7569)	0.0518 (0.0281)*
재정적 요인				
	1인당 총지출(log)	-90.0821 (120.622)	1141.3274 (976.4077)	-0.3635 (0.1710)**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밀도(log)	-28.3276 (36.6071)	66.1192 (351.8855)	-0.0723 (0.0473)
	월평균소득(log)	-44.0585 (112.683)	1821.1494 (859.3246)**	0.1078 (0.1921)
통계변수				
	농촌지역	92.3982 (50.7564)*	377.4492 (447.7696)	0.1054 (0.0996)
	인구(log)	139.6064 (51.6225)***	2295.1612 (509.5339)***	-0.2612 (0.0833)***
	유형1(의료복지)	-200.7884 (90.7352)**	-655.4090 (798.6183)	-0.2157 (0.2760)
	유형2(관광레포츠)	-3.2833 (65.3727)	282.9961 (675.3067)	-0.0209 (0.1339)
	유형3(교육)	-131.5287 (67.7193)*	-540.2376 (851.3474)	-0.3647 (0.1443)**
	유형4(유통물류)	-110.5535 (86.7565)	-1256.7619 (789.3231)	-0.2884 (0.1815)
	유형5(산업연구)	-10.9209 (65.8444)	-177.7082 (594.0510)	-0.1314 (0.1516)
	유형6(향토자원진흥)	-24.2556 (69.5110)	-662.4251 (633.7067)	-0.3682 (0.1392)***
	상수항	-670.3469 (1432.50)	-4.165e+04 (12090.72)***	5.0665 (2.1293)**
	광역정부 F(p)	2.58 (0.0019)	0.55 (0.8985)	2.24 (0.0076)
	B-P Chi ² (p)	10.90 (0.000)	77.14 (0.000)	0.94 (0.3335)
	Mean VIF	4.57	4.53	4.57
	N	228	228	228
	F(p)	3.6914 (0.000)	8.1690 (0.000)	4.0160 (0.000)
	Adj. R ²	0.2170	0.2588	0.2669

참조: * < 0.1 ** < 0.05 *** < 0.01.

주1: ()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분산에 로버스트(robust)한 표준오차임.

주2: B-P Chi²(p)는 잔차의 이분산성 탐색을 위한 Breusch-Pagan 검증결과임.

주3: 광역정부 F(p)는 광역정부 가변수의 통합가설검증 결과이며, 사업체수 모형과 자체수입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는 결과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위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부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1년간의 시간차이를 두고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제도, 재정,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다음해의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역경제성장 지표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 모델들은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지는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결과는 <표 3>에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세 모델은 모두 적게는 67%에서 많게는 약 82%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추정된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F의 유의확률이 세 모델 모두에서 0.000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2009년의 사업체 수에 대한 모델은 Adj. R^2 가 0.7705이고, 2009년의 사업체 종사자수 모델의 Adj. R^2 는 0.6658, 그리고 2009년의 자체수입 모델의 Adj. R^2 는 0.8184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영향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재정적 여건인 1인당 총지출이 세 모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양의 영향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8년의 1인당 지출이 많을수록 2009년도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체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8년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나 투자가 2009년도에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자체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⁶⁾ 그리고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2009년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대한 2008년 인구밀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의 월평균소득 또한 2009년의 종사자 수와 자체수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 규모나 평균소득은 그 지역의 소비규모와 능력을 의미하며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주거지역을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고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소비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와 월평균소득은 지역경제성장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며, 지역경제성장 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일정부분 생활수준, 소비능력, 관련된 인프라 등과 같은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주장(Wolman & Spitzley, 1996)을 확인하는 것이다.

6) <표 2>에서 1인당 총지출이 2008년 대비 2009년의 자체 수입의 증감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자치단체일수록 경제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많이 했지만 경제적 악화와 지연된 회복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체 세수입이 적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표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전년도에 재정적 지출이 많을수록 다음 년도의 자체수입이 많다는 것은 자명하다.

<표 3> 분석결과(1년 후의 지역경제지수)

변수	모형	2009 사업체 수	2009 종사자 수	2009 자체수입
		Coef (Std. Err)	Coef (Std. Err)	Coef (Std. Err)
설명변수				
정책·제도(특구제도)				
	특례활용수(log)	-205.6498 (393.0307)	-3003.8665 (4034.3726)	-0.0700 (0.1071)
	지역특구제원확보(log)	243.8207 (159.0603)	2071.4057 (1606.8354)	0.0441 (0.0304)
재정적 요인				
	1인당 총지출(log)	4888.3662 (992.4211)***	40501.6005 (10331.706)***	1.4760 (0.3300)***
사회·경제적 요인				
	인구밀도(log)	1386.6130 (327.5529)***	10324.0797 (3404.5608)***	0.0430 (0.1192)
	월평균소득(log)	2176.3909 (1636.226)	44207.9199 (23613.246)*	1.0241 (0.2948)***
통계변수				
	농촌지역	1251.6516 (584.3339)**	12573.4974 (6246.6989)**	0.4147 (0.1278)***
	인구(log)	6732.7636 (575.7900)***	58380.1669 (6063.1086)***	-0.1239 (0.0980)
	유형1(의료복지)	-2412.6486 (1048.555)**	-1.948e+4 (9337.3725)**	-0.0182 (0.3084)
	유형2(관광레포츠)	-215.9313 (691.6394)	-2053.5998 (6438.1604)	0.0603 (0.1956)
	유형3(교육)	-1913.5630 (893.8642)**	-1.408e+4 (9753.9948)	-0.2602 (0.1707)
	유형4(유통물류)	-919.9885 (791.2063)	-1.145e+4 (7293.7973)	-0.5600 (0.2666)**
	유형5(산업연구)	-217.7219 (760.9062)	-1.037e+4 (6515.6857)	-0.4401 (0.2011)**
	유형6(향토자원진흥)	-1877.0711 (737.4737)**	-1.722e+4 (6535.5198)***	-0.5147 (0.2057)**
	상수항	-1.203e+5 (14276.03)***	-1.159e+6 (1.701e+5)***	-10.5663 (3.2165)***
	광역정부 F(p)	1.47 (0.1267)	1.24 (0.2495)	1.84 (0.0347)
	B-P Chi ² (p)	49.34 (0.000)	80.67 (0.000)	155.37 (0.000)
	Mean VIF	4.53	4.53	4.57
	N	228	228	228
	F(p)	47.3742 (0.000)	33.1053 (0.000)	43.0443 (0.000)
	Adj. R ²	0.7705	0.6658	0.8184

참조: * < 0.1 ** < 0.05 *** < 0.01.

주1: ()의 값은 표준오차이며, 이분산이 존재하는 경우 이분산에 로버스트(robust)한 표준오차임.

주2: B·P Chi²(p)는 잔차의 이분산성 탐색을 위한 Breusch-Pagan 검증결과임.

주3: 광역정부 F(p)는 광역정부 가변수의 통합가설검증 결과이며, 자체수입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하였으나 지면상의 제약으로 회귀계수와 표준오차는 결과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이 연구는 뚜렷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지역특구제도가 실질적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표 2>와 <표 3>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자체수입증감에 대한 지역특구재원확보의 영향을 제외하고 특례활용수와 지역특구재원확보가 지역경제성장 변화지수 및 지역경제지수에 미친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에, 재정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영향요인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표 2>의 1년간의 지역경제성장 변화지수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표 3>의 1년 후의 지역경제성장 지수에 대한 영향에서는 재정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구제도를 통한 정책적 지원만으로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 쉽지 않으며 동시에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재정적, 경제적 조건들도 동시에 촉진시킴으로서 보다 포괄적으로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만 지역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안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재정적 여건이고 사회경제적 기반이 함께 갖추어져야만 한다(Wachtel, 2003). 이러한 결과는 지역특구제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적 여건보다는 재정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기업유치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의 촉진에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VI.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기존의 획일적 규제개혁을 지양하고 규제완화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선별적·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특구제도의 사례를 통해 규제완화의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특구에서 활용되는 규제특례와 특구사업에 투입되는 재원확보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체계적 분석을 위해 규제특례 활용과 재원확보의 정도를 정책·제도적 요인으로 설정하고 그 외에 재정적 여건, 사회·경제적 여건을 지역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동시에 포함시켜서 과연 정책·제도적 요인이 지역특구제도의 효과로서 지역경제성장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제도적 변수인 지역특구 재원확보의 정도가 자체수입 증감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지역경제성장 변화지수와 지역경제 성장지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에 전년도에 재정적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은 다음 해의 기업유치, 고용창출, 자체세수 증대에 대해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적 여건이 모든 모델에서 지역경제성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여건도 지역경제성장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자치단체의 재정적 여건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이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결과는 기존연구에서도 일부 논의되었지만 실질적 지역경제성장은 지역특구제도와 같은 부분적 처방보다는 그 지역의 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포괄적 정책접근이 가능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자들은 이러한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보다 합리적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유치나 고용창출 등의 직접적 효과 이외에 인프라 구축 등에 따른 간접적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짧은 정책집행 기간과 데이터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특구 도입 직후부터 고려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고 2008년 이후의 단기간 정책효과만을 고려했다. 또한,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경제성장의 효과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성장을 대변하는 대표적 변수들을 가지고 지역특구제도를 포괄한 기타 여건들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한계들은 향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고려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강만옥. (2006). 환경규제가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패널데이터 분석. <환경정책>. 14(1): 169-193.
- 강윤희. (2008). 지역경제 성장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42(1): 365-381.
- 경기개발연구원. (2004). 수도권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규제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김광춘. (2011). 지역경제성장의 영향 요인과 요인별 기여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김군수. (2008).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경기개발연구원.
- 김상현. (2010). 정부규제와 경제성장: 이론적 배경에 기초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48(3): 59-82.
- 김성태. (2000). 한국지방공공자본의 지역경제 성과분석. <재정논집>. 14(2): 99-124.
- 김은경·김정태. (2007). <수도권규제개혁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기개발연구원.
- 김중구. (2007). 지역경제력 격차와 지방정부의 공공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동태적 패널분석의 적용. <한국동서경제연구>. 19(1): 119-142.
- 김종섭. (2003). 경로분석을 이용한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요인 분석: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6(3): 207-222.
- 김종순. (1992). 지역경제와 지방재정력 강화. <지방자치연구>. 4(2): 183-202.
- 김종호·김원규·조창현. (2007). <정부규제와 경제적 성과>. 산업연구원.
- 김진덕·조택희. (2012). 지역경제 성장요인에 관한 연구: 충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4(1): 63-86.
- 김태영. (200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효과분석. <2001년도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한국행정학회. 1-24.
- 김태은·구교준. (2007).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부규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4): 203-228.
- 모성은. (1999).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1(1): 45-62.
- 문병근·성상기. (2011).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6대 특별시·광역시 를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13(3): 87-118.
- 박종규. (1998). 중앙정부 세출 및 보전수단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 박지형·홍준현. (2007). 시·군통합의 지역경제성장 효과. <한국정책학회보>. 16(1): 167-196.
- 백운현. (2004). <부산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학위논문.
- 백웅기·박승준. (2007). <거시 재정계량모형을 통한 재정지출 효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오병기. (2002). 우리나라 지방재정지출의 시차분석. <재정정책논집>. 4(1): 22-43.
- 오병기. (2006). 비도시지역 경제개발비가 지역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50: 163-180.
- 윤지웅·김태영·김주경. (2009).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13(3): 135-157.
- 이미홍. (2003). 산업계의 환경혁신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37(1): 293-313.
- 이영범·지현정. (2011). 환경규제, 기술혁신, 생산성과의 관계: Porter의 가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1): 171-197.
- 이희연.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정책과 지역발전. <국토>. 336: 6-16.
- 임동순·조창현·김대욱. (2008). <규제개혁의 효과분석 및 평가>. 산업연구원.
- 조동근·김종백. (2005).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재정정책논집>. 7(2): 147-171.

- 조주현. (2003). 환경규제강화와 기술혁신: 한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제학연구>. 51(4): 279-313.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11a). <지역특화발전특구 연례보고서>.
-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2011b). <지역특구제도 발전전략 및 활성화 방안>.
- 최병선. (2012).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최근의 논쟁에 대한 규제정치 이론의 시사점. <한국정책학회보>. 21(3): 1-31.
- 최재현. (2009).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과제. <국토>. 336: 33-43.
- 황의진. (2002). 교통시설 건설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고속도로 건설의 효과 예측 모형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37(2): 159-172.
- Alesina, Alberto, Silvia Ardagna, Giuseppe Nicoletti & Fabio Schiantarelli. (2003). Regulation and Investment.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252 AN: 0911460.
- Arrow, K. J. & M. Kurz. (1970). *Public Investment, The Rate of Return, and Optimal Fiscal Policy*. Baltimore: Resources for the Future Inc. and John Hopkin Press.
- Bailey, Elisabeth, E. (1986). *Science*. New Series. 234(4781).
- Bassanini, Andrea & Ekkehard Ernst. (2002). Labour Market Institutions, Product Market Regulation, and Innovation: Cross-county Evidenc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316.
- Barro, R. 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103-125.
- Bayoumi, Tamim, Doug Laxton & Paolo Pesenti. (2004). *Benefits and Spillovers of Graters Competition in Europe: A Macroeconomic Assessment*.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eauregard, R. (1993). Constituting Economic Development: A Theoretical Perspective. In *Theorie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edited by R. D. Bingham and R. Mier. Newbury Park. CA: Sage.
- Becker, Gary & Casey Mulligan. (1997). The Endogenous Determination of Time Prefer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3): 729-758.
- Blair, J. P. & R. H. Fichtenbaum, & J. A. Swaney. (1984). The Market for Jobs: Locational Decisions and the Compet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Urban Affairs Quarterly*. 20: 64-77.
- Bloom, D. E., Canning, D., Sevilla, J.. (2001). The Effect of Health on Economic Growth: Theory and Evidenc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no.: 8587.
- Bowman, A. O'M. (1987). *The Visible Hand: Major Issues in City Economic Policy*. Washington, DC: National League of Cities.
- Bowman, A. O'M. (1988). Competition for Economic Development among Southeastern Cities. *Urban Affairs Quarterly*. 23: 511-527.
- Boyle, J. & D. Jacob. (1982). The Intracity Distribution of Services: A Multivariat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2): 371-379.
- CEPR-IFS. (2003). *The Link Between Product Market Reform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European Commission DG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E/2002/02.
- Feiock, Richard C. & Moon-Gi Jeong. (2002). Regulatory Reform and Urban Economic Development. *State and Local Government Review*. 34(3): 153-159.
- Feiock, Richard C. (1987). Urban Economic Development: Local Government Strategies and Their Effects. *Research in Public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4: 215-240.
- Furdell, P. (1994). *Poverty and Economic Development: Views of City Hall*. Washington, DC: National League of Cities.

- Grier, K. & G. Tullock, G. (1989). An Empirical Analysis of Cross-National Economic Growth. 1950-1980,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4(1): 259-276.
- Jaffe, Adam B., Steven R. Peterson, Paul R. Portney, & Robert N. Stavins. (1995).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the Competitiveness of U.S. Manufacturing: What Does the Evidence Tell Us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1): 132-163.
- Jones, B. D. & L. W. Bachelor. (1993). *The Sustaining Hand*.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Kahn, Matthew E. (2006). *Green Cities: Urban Growth and the Environment*.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Kindleberger, C. and B. Herrick. (1977).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tudent edition. London: McGraw-Hill Kogakusha.
- Koven, Steven G. & Thomas S. Lyons. (2003).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r State and Local Practice*. Washington D. C.: ICMA Press.
- Lanoie, Paul, Michel Patry, and Richard Lajeunesse. (2008).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oductivity: Testing the Porter Hypothesis.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30: 121-128.
- Lucas, R.E.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1): 3-42.
- Matulef, M. L. (1987). Strategie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Boston. March 28- April 1.
- Nicoletti, G. & S. Scarpetta. (2003). Regulation, Productivity, and Growth: OECD Evidence. *Economic Policy*. 36: 11-72.
- Oman, Charles. (2000). *Policy Competi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 Study of Competition among Governments to Attract FDI*. Paris: OECD.
- Palmer, Karen, Wallace E. Oates and Paul R. Portney. (1995). Tightening Environmental Standards: The Benefit-Cost or No-Cost Paradig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 119-132.
- Peterson, Paul E. (1981). *City Limit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orter, Michael E. & Claas van der Linde. (1995a). Green and Competitive: Ending the Stalemate. *Harvard Business Review*. 73(5): 120-134.
- Porter, Michael E. & Claas van der Linde. (1995b). Toward a New Conception of the Environment-Competitiveness Relationship. *Th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97-118.
- Riposa, G. & G. Andranovich. (1988). Whose Interests are Being Served in Economic Development Policy?. *Paper Presented at Urban Affairs Association Conference*. March. St. Louis.
- Romer, P. M. (1990). Endogenous Techn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5): 71-102.
- Ram, Rati. (1986). Government Size and Economic Growth: A New Framework and Some Evidence from Cross-Section and Time-Series Data.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76(1): 191-203.
- Rubin, Irene S. and Herbert J. Rubin. (1987).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 The Poor (Cities) Pay More. *Urban Affairs Quarterly*. 23(1): 37-62.
- Schneider, M. (1989). *The Competitive City*.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Schwartz, Dafna, Joseph Pelzman & Michael Keren. (2008). The Ineffectiveness of Location Incentive Programs: Evidence From Puerto Rico and Israel.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2(2): 167-179.
- Sethi, D., S. Guisinger & D. L. Ford & S. E. Phelan. (2002). Seeking Greener Pastur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Changing Trend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lows in Response to Institutional and Strategic Factors. *International*

- Business Review*. 11: 685-705.
- Swanstrom, T. (1985). *The Crisis of Growth Politics, Cleveland, Kucinich and the Challenge of Urban Populis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Vries, Frans P. de & Cees Withagen. (2005). Innovation and Environmental Stringency: The Case of Sulfur Dioxide Abatement. *Center Discussion Paper*. No. 2005-18.
- Wolman, Harold & David Spitzley. (1996). The Politics of Local Economic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0(2): 115-150.
- Yale Center for Environmental Law and Policy. (2006). *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ment Project*. <http://www.yale.edu/esi>.
- Zagler, Martin & Georg Durnecker. (200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Journal of Economic Survey*. 17(3): 397-418.

[저자소개]

呂 且 珉 한양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국회예산정책처를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에 재직 중이다. 정부규제, 재난관리, 정책분석평가, 재무행정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재난관리사업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연구”(2010), “위험 및 안전규제 비용편익분석의 현실적 요건의 모색”(2009, 공저), “재난관리 이론의 관점에서 본 실패론의 함의”(2006, 공저)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yuhcm@daum.net).

李 錫 煥 미국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된 관심분야는 재무행정, 지방재정, 정부성과평가, 계량분석 등이다(lshufo@hanyang.ac.kr).

河 顯 相 미국 Florida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행정학 전공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분야는 지방 및 도시행정이며, 지역개발, 환경,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hsha@kookmin.ac.kr).

논문투고일자: 2013. 3. 8/ 심사외뢰일자: 2013. 3. 14(초심)/ 2013. 4. 11(재심)/ 게재확정일자: 2013. 4. 19.

부록 1

변수와 척도

변수	척도	출처	연도
종속변수			
사업체수 증감	2009 사업체수 - 2008 사업체수(개수)	통계청	2008/2009
사업체수	2009 사업체수 (개수)	통계청	2009
사업체 종사자수 증감	2009 사업체 종사자수 - 2008 사업체 종사자수	통계청	2008/2009
사업체 종사자수	2009 사업체 종사자수	통계청	2009
1인당 자체수입 증감	2009 [(지방세 + 세외수입)/인구] - 2008 [(지방세 + 세외수입)/인구] (백만원)	지방재정연감	2008/2009
1인당 자체수입	2009 (지방세 + 세외수입)/인구 (백만원)	지방재정연감	2009
설명변수			
정책·제도(특구제도)			
특례활용수(log)	2008년도에 활용하고 있는 규제특례(개수)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지식경제부	2008
지역특구재원확보(log)	2008년도 재원확보 금액(억원)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재정적 여건			
1인당 총지출(log)	2008년도 총지출(백만원)	지방재정연감	2008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밀도(log)	인구 ÷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통계연보	2008
월평균소득(log)	2007년도 월평균 소득(만원)	한국고용정보 원	2007
통제변수			
농촌지역 인구(log)	군단위(1)/시, 구(0) 주민등록인구(명)	국토해양부 통계청	2008 2008
유형1 (의료복지)	의료복지(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유형2 (관광레포츠)	관광레포츠(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유형3 (교육)	교육(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유형4 (유통물류)	유통물류(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유형5 (산업연구)	산업연구(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
유형6 (향토자원진흥)	향토자원진흥(1)/아니면(0)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 특별기획단	2008